

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. 5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 김령석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 이영승 (044-200-2535)

건설현장 불법행위,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- 「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」도 논의 -

- 한덕수 국무총리,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-

[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]

- 한 총리, “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,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”
- △(단속점검 강화) ▲200일 특별단속 ▲노조 불공정행위 감시·감독 ▲피해사례 일제조사 등
- △(제도 개선) ▲불법·부당행위 처벌·제재를 위한 수사·단속 강화 ▲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
- △(예방·홍보 강화) ▲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▲국민 공감대 형성 ▲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

[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]

- 한 총리, “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,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”
- △(계약안전장치 강화) ▲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▲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
- △(피해자 지원) ▲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▲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
- △(재발방지) ▲특별단속 연장 ▲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▲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

[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]

- 한 총리, “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쉼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”
- △(생산·해체) ▲자원순환형 패널생산·R&D ▲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▲표준시방서 제작 등
- △(수거·처리) ▲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▲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
- △(감량화·기반) ▲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▲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▲통계활용 및 정보제공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」, 「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」, 「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」을 논의했다.

< 안건 1.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>

-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.
 -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,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.
-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·고용부·공정위·경찰청이 참여하는 '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'를 구성하였다.
 -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·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.
 - * 경찰청 243명 송치,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,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
 - 그러나,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,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.
 - 다만,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.
-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
 - 먼저,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('22.12월~'23.6월) 등 엄중한 수사·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.
 - 또한, 불법·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계약·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'민간입찰시스템'의 구축을 추진한다.
 - * (現)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(불투명) → (改) 하도급사의 인력 및 장비 계약 시 입찰시스템 활용
 -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,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.

- 아울러,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- 정부는 금번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,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 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.

< 안건 2.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>

- 정부는 속칭 ‘빌라왕’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
- (그간 추진현황)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「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」을 발표하고,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.
 -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('22.9.23)하고,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, 긴급 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(1월 출시),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(1월) 등을 추진하는 한편,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.
 - 또한,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.
 - 이와 더불어,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.
 -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「법률지원 합동 TF」를 운영하고 있으며, 임차인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.
- (향후추진계획)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,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먼저,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*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
* (주요내용)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,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하도록 의무화

-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,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, 범정부 특별단속('22.7~'23.1)을 연장하고,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,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.

□ 정부는 학계, 업계,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.

< 안건 3.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>

□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에 따라

-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·재사용율 80% 이상(EU 수준)을 목표로 설계·생산, 해체, 수거·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「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.

□ 우선,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·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 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*하고,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.

* 환경성보장제(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대해 관리) 적용 확대: 현재 사후관리(재활용단계) 대상 → 사전관리(제조단계) 대상까지 포함

-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·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&D도 추진한다.

□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·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*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.

* 「전기공사업법」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수행

-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·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*를 마련하고,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.
 - * (소규모 발생) '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' 운영 (대규모) 전문업체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 (재해대비)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중심으로 보관체계 운영

-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(기관)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*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,
 - * 수도권·강원권 / 충청권 / 영남권 / 호남권 / 제주권
 -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·기초 지자체별 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*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반영**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.
 - * 먼저 폐패널의 외관·성능 등에 따라 재사용 여부 고려, 불가능시 패널 재활용
 - ** 생산자·판매업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 물량 이상의 회수·재활용 의무를 부여 (금년부터 태양광 패널 적용)하는 제도로 의무량 산정시 재사용 물량 고려

- 끝으로,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·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령석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승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건설현장>	국무조정실 노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원아 (044-200-2375)
		담당자	경 감	변지환 (044-200-2377)
<공동>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 (044-201-3521)
담당 부서 <전세사기>	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병길 (044-200-2235)
		담당자	서기관	임정환 (044-200-2236)
<공동>	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	책임자	팀 장	박동주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	장은석 (044-201-4150)
담당 부서 <폐패널>	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	책임자	과 장	권오영 (044-200-2497)
		담당자	연구관	강석범 (044-200-2499)
<공동>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담당자	과 장	마재정 (044-201-7380)
		담당자	사무관	소병훈 (044-201-7384)
<공동>	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	담당자	과 장	김용태 (044-203-5370)
		담당자	사무관	전수하 (044-203-5373)
<공동>	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	담당자	과 장	강감찬 (044-203-3880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욱 (044-203-3895)